

김승원 지키는 與 vs 낙마 버르는 野… 법무장관 청문회 전운

민주 “낙마 사유 아냐” 적극 옹호
국힘, 의혹 열거하며 지명철회 촉구
한동훈, 제넨셀 거론하며 수위 높여

국회가 이번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약로비’ 등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옹호하며 하루 남은 인사청문회 정면돌파를 지원했다. 반면, 야당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낙마할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한다. 특히 정치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며, ‘신약로비’ 등 김 후보자가 받는 의혹이 ‘낙마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신약로비’ 사건 관련 수사 자료 등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찰이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약로비 의혹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제넨셀’의 임상 2·3상 승인을 위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민원 문자를 넣었다는 의혹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이 꽃놀이패처럼 쥐고 흔드는 녹취록과 수사 기록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최근 법

사위원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까지 확대됐는지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탈탈 털었지만 당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만약 수사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됐거나 수집된 것이라면 정치에 썩먹을 일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받을 일”이라며 “한 의원은 검찰 버릇 못 버린 캐비닛 정치 그만하고 수사받을 각오부터 하라”고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이 2022년 ‘신약로비’ 의혹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간 연관성을 찾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수사가 2022년 11월 대검에서 하명 수사로 서부지검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검찰이 시작한 게 이재명 대장동과 김승원 의원의 관련성을 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철회해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공공연하게 김생용사(金生龍死-김승원은 지키고 용해인은 낙마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다음 차례는 김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쥐약 로비 부정 청탁으로 주식투자자들의 피를 빨았고, 가족 조합을 만들어, 온 가족이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며 “위장전입으로 아들딸은 좋은 학교로 보냈고, 음주운전 전과까지 꼼꼼하게 이력

서에 채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라며 “민심, 민생보다 이재명 면죄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며 “이 정부 인사들은 참 말이 길다. 공소 취소할 것인가에 안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면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하위 동물 실험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제넨셀이 실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93명에게 투여한 것을 두고 “식약처는 ‘쥐가 토하고 죽은 부작용을 고의로 삭제한 하위의 보고서’를 믿고 임상시험 승인을 내줬다”며 “하위 보고서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 정신인 식약처 직원이라면 절대로 승인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식약처가 속아서 승인내주지 않았다면 93명의 시민이 독약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 중앙아시아 5개국과 ‘릴레이 정상외교’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한국 기업 현지 진출 확대 추진
내일 제1차 한·중앙양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모색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5개국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총 13건의 정부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교환식이 진행된다.

15일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진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16일에는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서울에서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저녁에는 각국 정상 및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이후에는 참여국 정상 및 정부·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실질 협력 심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규제·지재권 협력과 인프라·플랫폼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공조로 58억원대 보이스포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자원·인프라 분야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재난대응 등 첨단·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착 9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문화 교육과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중앙아시아 현지 사회에 정착한 고려인의 역사적 기여를 재조명하고 양 지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野, 與 지지율 역전 “이재명 정부 실정, 대여투쟁 집중 영향”

국민의힘은 14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최근 단행된 2차 개각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갈등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한 점도 지지율 역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지율 역전 배경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괴리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주식에 이어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어긋나는 형태들이 (이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열 대신 강력한 대여투쟁에 집중했다는 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며 “올림픽공원 사태 이후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2030MZ세대들의 마음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포인트(p),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전주보다 3.6%p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3%로 3.8%p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 주보다 4.5%p 오른 42.1%, 민주당이 5.7%p 내린 36.1%로 나타났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쪽이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대입 원서 접수 전산장애에 국회 공방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입 공정성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확대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산장애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95.7%에 달하는 아이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98.1%가 대책을 바라고 있고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을 갖춘 대안 기기가 나오면 우선 쓰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와 논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문화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편의 기능을 늘리고 디지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독을 최소화하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실제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공문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산장애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짚었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되면서 교육부는 접수를 못한 수험생 최대 1200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시험 문제 하나 잘못 출제되면 나라가 들쭉거린다. 근데 지금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못 한 사람이 1200명이다”고 지적했다.

/박경수 기자